

# 광주 아파트 ‘화물차 주차 금지’ 손편지 논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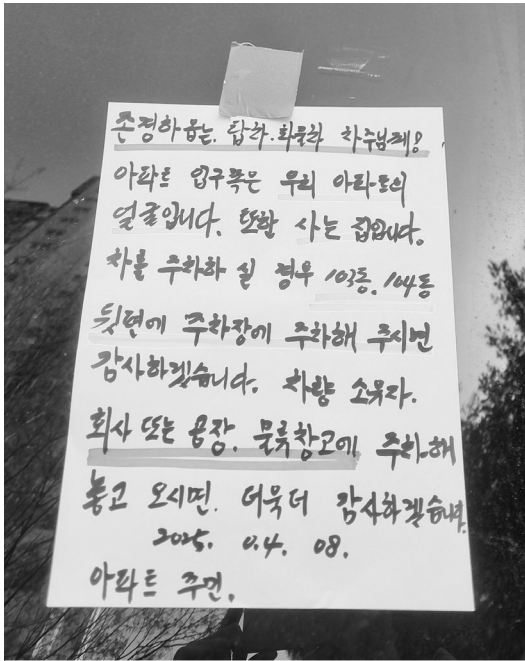
탑차·화물차 앞 유리창에 부착  
뒤편 주차 요청...차종 차별 지적  
‘물상식한 아파트’ 온라인 게재  
차주 “잘못한 것 없는데...” 당황  
아파트 관리 규약상 문제 없어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탑차·화물차 앞 유리창에 부착된 주차요청 손편지가 공개돼 온라인상에서 빈축을 사고 있다. 아파트 규약에도 없는 일반적인 요구에 대한 비판과 함께 차종에 따른 차별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물상식한 광주 북구 어느 아파트’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아파트에 주차된 탑차의 앞 유리에 손으로 쓴 쪽지가 붙어 있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자필로 ‘탑차·화물차 차주님께, 아파트 입구 쪽은 우리 아파트의 얼굴입니다. 뒤편 주차장을 이용하거나 차량 소유자 회사 또는 공장, 물류창고에 놓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량 소주자. 회사 또는 공장, 물류창고에 주차해 놓고 오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2025. 04. 08. 아파트 주민.’



9일 오전 찾은 광주 북구 한 아파트 입구 쪽에 주차된 차량 앞 유리에 손편지가 붙어 있다.

게시글이 관심을 모으자 글 작성자는 차량이 주차된 사진과 아파트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알렸고, 이 글은 한 시간이 채 되지 않아 많은 조회수를 기록했다.

사연을 접한 이들은 ‘아파트 이미지를 망친다’, ‘아파트에 얼굴이 어둡다’, ‘손발

이 오그라든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9일 오전 찾은 해당 아파트 입구 쪽에 주차된 탑차 앞 유리창엔 여전히 손편지가 청테이프로 붙어 있었다. 코너 주변에 설치돼 있는 불록거울에도 같은 내용의 손편지가 부착돼 있었다. 이날 아파트 주

차장에 주차돼 있던 3개의 탑차 모두 주차 구역 안에 바르게 위치해 있었다.

해당 차량 주인 A씨는 평소 아파트 입구 부근에 주차할 땐 시야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신경 쓰고 있다고 전했다.

A씨는 “손편지가 붙어 있는 줄 전혀 몰

랐다. 일부러 구석에 주차를 했는데 누구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확인 결과 이 같은 손편지 부착은 이날 하루에만 벌어진 일은 아니었다.

또 다른 탑차 차주 B씨는 지난 4일부터 2차례 차량 앞 유리창에 손편지가 부착돼 있었다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B씨는 “손편지를 붙인 사람은 주차장에 좋은 차량들이 주차해야 명품 아파트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불법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특별한 잘못을 한 것이 아닌데 화물차라는 이유로 이같은 손편지가 붙어 있어 당황했다”고 말했다.

이어 “관리사무소측에서 편지 작성자를 확인해 사과문을 게재하라고 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 규약상 차종에 따라 아파트 입구 방면에 주차하면 안 된다는 조항은 없으며 게시글에 나온 해당 탑차 3명의 차주 모두 아파트 주민으로 차량 또한 등록된 차량으로 확인됐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손편지 작성자는 탑차가 주차된 동이 아닌 뒤편 주민인 것 같다”며 “전날 차량에 붙어 있던 종이는 모두 제거했고 경비실 직원에게도 보이는 대로 치워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글·사진=정승우 기자

## 광주·전남경찰 잇단 음주운전... 기강 해이 ‘도마 위’

전남경찰 순경, 시민신고에 ‘덜미’  
음주적발 따른 ‘직위해제’ 사례도  
“음주운전 등 의무위반 근절 총력”

광주·전남지역 현직 경찰관들이 잇따라 음주운전 범죄에 연루되며 기강 해이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광주 광산경찰에 따르면, 전남경찰 소속 A 순경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A 순경은 지난 8일 오전 2시50분께 광산구 제2순환도로 첨단 방면 산월나들목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비틀거리며 주행하던 차량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 순경을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로 나타났다.

경찰은 A 순경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내부 징계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6일에도 광산경찰 하남지구대 소속 B 순경이 광주 서구 매월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서부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돼 직위 해제됐다.

지난달 15일에는 전남경찰청 소속의 한 경감이 교통시설물을 들이받은 뒤 출

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해 조사를 받고 있으며, 지난해 11월에도 같은 청 소속의 한 경위가 접촉사고 후 음주 측정을 거부해 입건된 바 있다.

특히 이번 A 순경의 음주운전 사례는 탄핵 정국에 따른 비상근무가 해제된 직후 발생하면서, 지역 경찰들의 내부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광주·전남경찰은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특별경보를 발령하는 등 조직 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에 나섰다.

전남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감독을 강화하고, 징계 기준을 엄정히 적용해 직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며 “지속적인 예방 교육과 홍보로 의무위반 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준명·이정준 기자**

## 광주·전남 노동단체 “중대재해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전남서 3월 한달간 노동자 5명 사망  
지자체·노동부의 무대책 등이 원인

광주·전남 노동단체들이 전남도에 중대재해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등 노동단체들은 9일 오전 순천 동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 한 달간 전남에서만 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노동부의 ‘중대재해 발생 알람’을 통해 확인된 사고는 4건이며, 제보를 통해 확인된 사고도 1건이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노동단체는 “지자체의 무대책, 노동부

의 형식적인 대책에 노동자들이 숨지고 있다”며 “사고 유형도 끼임, 추락, 자재, 낙하 등 다양하게 나타나 산업 전반의 구조적 안전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광주지방노동청장이 공장을 방문해 ‘모범적인 회사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한 지 하루 만에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 재발 방지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사고 원인 분석 및 제도적 개선도 제자리걸음이고 사고가 날 때마다 ‘유감’ 수준의 대응에 그치며 사후 약방문식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정준 기자**

**DK**

DK

디케이 주식회사

봄, 공기의 새로운 정의

공간을 빛내는 선택

봄철 미세먼지와 꽃가루도

이제 걱정 없이,

깨끗한 공기를 집 안으로.

모든 순간을 더 건강하게

디케이 공기청정기·살균기

www.e-dk.co.kr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